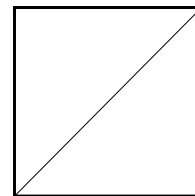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6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0. 21. (제 18 차)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0. 21.

## 1. 의결주문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은행법」에서 정하는 '다른 회사에 출자제한 규제'를 위반한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1항, 제2항
- 舊 「은행법」 (2017.4.18.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3(과징금)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0.7.16.) 심의필

<별지>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9억 82백만원

- 조치사유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 법적근거 : 「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2. 조치사유

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하 '금융업 등'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2017.3.6. 주금납입(1.5억위안; 2017.6.23. 1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2.5억위안 투자)을 통해 ◆◆◆◆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바,

2016.8.31. 및 2016.9.28.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산관리유한  
공사 지분투자 계획서」에서 ① 2016.9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 유상증자 형태로 ◆◆◆◆하나(2016.5.18. 설립등기만 완료)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③ 2016.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는 ◆◆◆◆  
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2016.7.28.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이하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

\*\*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

하나은행이 최초로 ◆◆◆◆하나의 지분을 25% 취득한 2017.3.6. 당시  
◆◆◆◆ 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 하나 최초 설립시(2016.5.18.)부터 2018.11.20.까지 ◆◆◆◆ 하나의  
법정대표자(동사장)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 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 ◆◆◆◆ 하나의 법정대표자인 ●●●(재임기간 : 2016.5.18.~2017.7.20.) 및 ♠♠♠  
(재임기간 : 2017.7.21.~2018.11.20.)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

\*\*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2016.2월, 중기협)에 따르면, 법정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  
사항으로 요구

◆◆◆◆ 하나에 대한 주금납입(2017.3.6. 및 2017.6.23.)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2017.7월경) 이후에도 ◆◆◆◆ 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  
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 초과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8.1.8. ◆◆◆◆하나가 자회사인 ☆☆☆☆의 중기협 등록(증권 유형)\*을 위해 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사모기금관리업무는 ◆◆◆◆하나가 아닌 ◆◆◆◆하나의 2개 자회사(★★★★, ☆☆☆☆)가 영위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1.19. 및 3.9. 등록 완료

\*\* 하나은행은 ◆◆◆◆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 하자, 2018.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

하나은행이 2017.3.6.(1차 주금납입시점)~2019.1.31.\* 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였음

\* 금감원이 ◆◆◆◆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 하나는 2018.11.21. 법정대표자를 ♠♠♠에서 ♣♣(자격 보유자)으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2019.2.1.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 하였음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2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 관계 법규

###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④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舊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4.18. 개정 前 기준>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4.18. 개정 後 기준>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5(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1항·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부칙 <법률 제14826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제1항·제2항, 제52조의2 제1항제3호, 제69조 제4항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상태
2.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법 제3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상태
3.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총한도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7.10.17. 개정 前 기준>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7.10.17. 개정 後 기준>



- 가.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 나. 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
- 다.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라. 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8. 팩토링업
-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 1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2.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업종
- 13의2.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④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⑤ 직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2(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17-38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7.10.19. 개정 前 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자본시장법」 제349조(과징금)·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에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times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times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times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times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times 7/16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times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text{억원}) \times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text{억원}) \times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180\text{억원} \times 7/4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0\text{억원}) \times 7/80$
2천억원 초과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180\text{억원} \times 7/40 + 1,800\text{억원} \times 7/8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00\text{억원}) \times 7/160$

<산정례>

#### 나. 삭 제

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5백만원 이하 (1단계)	$\times 7/10$
5백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2단계)	$\times 7/20$
2천5백만원 초과 1.25억원 이하(3단계)	$\times 7/40$
1.2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단계)	$\times 7/80$
5억원 초과 (5단계)	$\times 7/160$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삭 제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0.2%\*\* 또는 0.4%\*\*\*

\* 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180일초과 365일이내의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365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5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 (6)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7)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중대하지 않은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 (7) 정부의 시책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바. 삭 제

##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고발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의 별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

1.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3.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범질서에 배치되는 경우

4. 동일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별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2.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2> 제재양정기준

유 형	위법·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 하나은행 내규 「국외점포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지점"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에 소재한 당행의 지점을 말한다.
2. "국외현지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에 그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은행법」 제37조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당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3. "국외사무소"라 함은 대한민국 외에 소재한 당행의 사무소를 말한다.
4. "국외기타출자회사"라 함은 대한민국 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당행이 전략적 목적으로 출자하여 글로벌사업그룹이 관리하는 제2호의 국외현지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5. "국외점포"라 함은 국외지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사무소 3자를 통칭할 때 사용한다.

**제13조(업무의 수행)** 글로벌마케팅부장은 국외기타출자회사 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관리
2. 국외기타출자회사의 신용 및 재무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3. 출자 및 출구전략의 수립과 실행
4. 당행 보유 주식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유상증자, 주식분할, 배당, 자본감자, 전환사채 발행 및 기타 주권행사 등)에 대한 관리

**제18조(위임)** 글로벌사업그룹장은 국외점포 및 국외기타출자회사의 업종, 진출방식, 현지 규제, 관습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거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별도의 관리방안 또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감봉3월 이상	견책 이하	견책 이하
과실	견책 이하	주의	주의

(붙임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10.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9억 82백만원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 주의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하 ‘금융업 등’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2017.3.6. 주금납입(1.5억위안; 2017.6.23. 1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2.5억위안 투자)을 통해 ◆◆◆◆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바,

2016.8.31. 및 2016.9.28.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에서 ① 2016.9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 유상증자 형태로 ◆◆◆◆하나(2016.5.18. 설립등기만 완료)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③ 2016.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는 ◆◆◆◆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2016.7.28.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이하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

\*\*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

하나은행이 최초로 ◆◆◆◆하나의 지분을 25% 취득한 2017.3.6. 당시 ◆◆◆◆ 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최초 설립시(2016.5.18.)부터 2018.11.20.까지 법정대표자(동사장)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 북경량자하나의 법정대표자인 ●●●(재임기간 : 2016.5.18.~2017.7.20.) 및 ♠♠♠(재임기간 : 2017.7.21.~2018.11.20.)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

\*\*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2016.2월, 중기협)에 따르면, 법정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 요구

◆◆◆◆하나에 대한 주금납입(2017.3.6. 및 2017.6.23.)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2017.7월경) 이후에도 ◆◆◆◆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하나의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 초과 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8.1.8. ◆◆◆◆하나가 자회사인 ☆☆☆☆의 중기협 등록(증권유형)\*을 위해 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사모기금관리업무는 ◆◆◆◆하나가 아닌 ◆◆◆◆하나의 2개 자회사(★★★★, ☆☆☆☆)가 영위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1.19. 및 3.9. 등록 완료

\*\* 하나은행은 ◆◆◆◆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하자, 2018.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

하나은행이 2017.3.6.(1차 주금납입시점)~2019.1.31.\* 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였음

\* 금감원이 ♦♦♦♦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하나는 2018.11.21. 법정 대표자를 ♠♠♠에서 ♣♣(자격 보유자)으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2019.2.1.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2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3145-7062